

東北亞 經濟協力과 韓半島

趙 庸 鈞*3)

1. 最近 對內外的 環境의 變化

東北亞地域의 정치 경제적 환경은 최근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일찍이 環黃海經濟圈 및 環東海經濟圈을 포함하여 협력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변 환경의 큰 변화는 협력의 방향과 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대외적인 변화로는 세계경제의 汎世界化(globalization)와 地域化 현상의 강화추세를 들 수 있다. 95년 1월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제도적 차원의 세계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출범에 앞서 이미 세계경제는 원거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선진국의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요인이 결합되어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통합을 진전시켜 왔다. 이러한 흐름은 선진, 개도국 혹은 지역을 막론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지역도 세계화, 개방화 흐름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한편 汎世界化와는 다소 모순되는 듯한 경제협력의 지역화 추세 또한 90년대에 오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지역화는 선진국간 혹은 개도국간의 협력 형태에서 한걸음 나아가 NAFTA, APEC과 같은 선진·개도국간의 협력이 활발하며 그 밖에도 EU의 단일통화(유로) 출범과 같은 협력의 심화와 外延的 擴大, APEC 및 ASEM 그리고 범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추진 등과 같은 지역간 통합 내지 廣域化 현상 등 다양한 범위와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협력의 기반을 갖지 못한 국가들을 자극함으로써 지역협력의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域內環境의 최근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이 지역이 지난 20년 동안 경제 및 교역의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성장을 시현하였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중국은 80년 이후 1인당 소득에서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통해 이 지역의 성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작년 7월 태국에서 비롯된 외환·금융위기가 한국과 인도네시아로 확산되고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 지역의 경제적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초기의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음에

* 外交安保研究院 教授

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고도성장에 따르는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노정되면서 경제전반의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포괄적 경제위기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일본경제는 90년대 초반 이후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면서 위안화 가치의 불안정, 실업 증대에 의한 경기 둔화를 경험하고 있어 또 하나의 불안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제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절하된 자국 통화를 바탕으로 경쟁적 수출촉진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地球村 경제에서 개별 국가 차원의 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위기 발발 이후 각국이 국내 경제의 회복에 치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정책적 협력과 공조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경제위기에 앞서 냉전 종식 이후 이미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무엇보다 韓·中간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교역 및 투자 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매우 긴밀해졌으며 특히 東南沿海地域에서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북쪽으로 확대되면서 상해 이북으로부터 발해만에 이르는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한 축을 형성하는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정세와 정책 방향이 여전히 유동적 변수로 남아있기는 하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진행과 최근 금강산 관광개방 및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전 등에서 완만하나마 대외개방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오랜 경제난으로 체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의미있는 개혁과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역내 정세가 전반적으로 역내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8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역내 교류의 확대와 시장경제의 확산은 전반적으로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크게 제고시키고 있다. 1980-95 기간에 있어 동북아 지역의 역내교역은 7.6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 2.4배의 증가를 보인 세계교역 성장을 3배 이상 앞서고 있으며 그 결과 역내교역의 비중은 80년의 19.5%에서 95년 현재 29.2%로 상승하였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최근 역내교역상품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보완성은 물론 상품 교역이외의 투자, 산업협력, 자원개발 및 환경협력에 이르기까지 互惠性에 입각한 역내협력의 필요성은 그 깊이와 범위를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지역의 경제협력 논의에 임하는 역내국가들의 입장이 과거 정치적 측면의 효용성에서 세계경제의 통합 및 경쟁의 심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실제적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협력의 현실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東北亞經濟圈의 概念과 特徵

東北亞經濟圈이 포괄하는 지역의 범위는 이를 정의하는 사람이나 목적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한반도를 핵으로 하여 중국 및 일본의 인접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동북아경제권은 국지경제권의 측면에서 環東海經濟圈과 環黃海經濟圈으

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환황해경제권은 중국의 遼寧省으로부터 상해에 이르는 연안지역과 남북한의 서해안지역 및 큐우슈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서남부지역을 포괄하는 것이며 반면 환동해경제권은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과 남북한의 동해안 지역, 러시아의 연해주 및 일본의 동해에 면한 연안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단순한 지역적 의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제권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보완성의 측면에서도 가장 의미있는 圈域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권이란 특정지역에서 경제교류의 확대로 나타나는 지역화의 개념으로서 이는 관련 국가내 일부 거점지역을 협력 대상지역으로 하여 교역을 확대하고 생산요소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관련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경제권과 같은 地域經濟圈은 국가 혹은 정부 차원에서 제반 무역장벽을 제도적으로 제거하여 역내국가들간의 무역자유화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무역지대 등의 경제통합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앞에서 언급한 역내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유인에 못지 않게 다양한 제약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바로 인식하고 여기에 적절한 협력의 유형을 개발, 발전시키는 것은 호혜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지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분단국가의 존재에 따른 불안요인은 물론이고 이를 둘러싼 복잡한 헤게모니 구조와 영토분쟁의 미해결 등 냉전이 해소된 현재에도 여전히 협력을 가로막는 요소가 남아있다. 또한 이 지역은 소수의 국가 혹은 그 일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경제체제의 차이와 경제규모의 비대칭성 등 높은 경제적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광역협력체인 APEC의 축소판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비교적 동질적 그룹으로서의 EU나 선진 개도국간의 협력체인 NAFTA 뿐 아니라 개도국간의 협력체인 AFTA와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둘째 동북아지역은 다른 지역경제협력체와 비교하여 역내교역의존도가 30% 미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ASEAN에 비하면 다소 높지만 60%가 넘는 EU나 NAFTA의 40% 수준에 비해서도 훨씬 뒤떨어진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이 지역 국가들이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공통적으로 높다는 점과 관련 국가간 생산요소 賦存의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가 지금까지 역내 협력으로부터 격리되어 왔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과 같은 자연발생적 지역경제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국가간 협력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주체는 민간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역내 도시 및 지방간의 경제교류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끝으로 역내 각국간의 역사적 관계를 두고 볼 때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指導力의 결여가 지적될 수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제도적 지역경제협력체의 경우 예외 없이 이를 주도하는 국가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협력형태의 구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東北亞 協力の 中心으로서의 韓半島

90년대 이후 이 지역 경제의 다이나미즘이 입증되고 경제적 보완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小地域 協力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비

해 실질적인 협력은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의 다양성 즉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한반도와 중국 및 일본의 정치 및 경제체제의 차이와 소득 격차, 그리고 불안한 지역정세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면 이러한 요인들은 역설적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 한반도의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려를 포함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의 몇 가지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地政學的인 측면에서 한반도는 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간 혹은 지방간에 경제적 보완성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物流의 자유로운 흐름이 필수적이다. 동북아 국가간 상품과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에 있어 한반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한은 그 경제규모나 교역 및 투자규모에서 그 자체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양대 세력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여 지역협력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을 이용하여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韓半島 內 도로, 항만, 공항, 통신 등의 사회간접시설과 같은 물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 경제의 폐쇄성과 낙후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가스전개발과 같은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불참으로 인한 수송 효율의 저하가 결정적 장애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협력에 있어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의 요인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域內國들 사이에서 한국이 선발개도국으로서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가간 분업에 입각한 역내 산업구조의 구축이다. 이러한 분업은 역내 각 거점지역간 자원, 노동력 및 자본 등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기술의 발전수준 등을 고려한 수평적 혹은 수직적 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흔히 선진 개도국간에 이루어지는 수직적 분업 일변도의 구조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高부가가치 상품 흐름과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低부가가치 상품 흐름을 고착화하여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업을 탈피하고 호혜적 분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多國間 분업에서 중간규모 및 중간수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특히 호혜적 분업구조의 정착에는 기술협력 혹은 국가간 기술의 원활한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진국의 첨단 기술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에 곧바로 이전되기는 어려우며 점진적인 적응(adaptation)과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중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은 기술이전의 적응과정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해 역내 국가간 호혜적 분업구조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현재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한 걸림들은 북한의 위협에 의한 지역안보의 불안과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 있다. 오늘날의 지구촌 경제 하에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 중 특히 자본의 경우에는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각국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 결과 8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각국과 90년대에 들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도 93년 이후 외국인투자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정세의 불안정은 여전히 해외자본의 이 지역 유입을 저해하는 요

인이 되어 왔고 더욱이 최근의 東南亞 金融危機는 이러한 해외자본의 유입 추세를 현저히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북한 경제의 폐쇄성은 개방화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지역협력의 심화에 장애가 되어왔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이를 통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은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침체를 보이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구촌 시대에서 경제는 안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역안보의 확립 없이 효율적인 경제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지역협력 분위기의 성숙은 역으로 안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지역협력의 무대로 이끌어내려는 한국의 노력은 안보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조건과 경제규모 및 발전수준에 있어서 한국이 지니는 중간자적 위치는 동북아협력의 독특한 성격과 결부되어 한국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4. 바람직한 東北亞 경제협력의 方向

그렇다면 앞에서 본 지역경제권의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동북아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우선 동북아 지역은 역내국가의 경제체제 및 발전수준이 다양하고 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도적 성격의 협력체 구성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U와 NAFTA 등의 선진국간 경제통합은 물론 ASEAN과 같은 개도국간 협력의 경우에도 경제협력은 경쟁의 촉진과 공업발전에 필요한 시장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의 역내무역자유화가 협력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가 큰 동북아 지역에서는 역내무역자유화에 의한 통합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제도적 무역자유화로 인한 이익보다는 각 지역경제 일반에 있어서의 規模의 經濟, 外部 및 内部經濟 效果와 더불어 자원 및 기술협력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 배분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지역협력의 방향은 역내의 경제적 보완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장메카니즘을 원동력으로 하는 機能的 協力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은 이러한 경제적 합목적성 이외에도 경제체제 및 제도의 차이가 현격한 이 지역의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수단도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협력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동북아 협력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시장기능에 입각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 협력은 그 협력의 범위에 있어 包括的 협력보다는 경제적 보완성이 높은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동북아 지역의 경우에는 역내 공동관련사업 등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극동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 지역의 에너지 공동개발, 한·중·일 간의 대기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프로젝트의 추진 그리고 역내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공동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漸進的으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단계적 방법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능적 협력은

제도적 협력과는 달리 중앙정부간 협력보다는 지방간 협력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효율의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은 보완성이며 경제적 보완성이 가장 높은 인접부문 혹은 인접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협력으로서의 동북아협력은 남·북한,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多者間 協力の 형태를 띠지만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양자간, 도시 혹은 지방간 경제교류의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경제적 보완성에 입각한 自然經濟地域(Natural Economic Territory)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 동시에 대외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개방 유도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에 관한 지방정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보다 신속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방간 협력 혹은 국지적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결과 기능적 협력으로서의 동북아 협력은 각각의 지역적 성격을 고려하여 상이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소그룹 차원의 협력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지역 내에서도 동해 연안지역과 황해 연안지역 간에는 산업구조와 산업의 기반에 차이가 있으며 내륙지방과 연안, 도서지역 사이에도 협력의 분야와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지역을 환동해, 환황해 등의 소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예는 이미 화남경제권, 성장의 삼각지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국가간 협력이 아닌 지방정부에 의한 거점지역간 협력은 체제의 상이 등 제약요인을 용이하게 극복하면서 협력을 위한 협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또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은 개방적 협력이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의 개발전략이 對外指向的이며 그 결과 역외교역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는데 기인한다. 역내국들의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는 이 지역 국가들의 對美 교역 및 투자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동북아협력은 여타 제도적 협력과는 달리 개방적이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역내 협력과정에 역외 자본 및 기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경제의 활성화를 토대로 역외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APEC 차원의 협력이나 세계경제의 다자적 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5. 맺음말 :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의미

한국의 입장에서 본 동북아 경제협력의 일차적 목적은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온 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측면에 있다. 동북아경제권은 지리적 隣接性을 바탕으로 풍부하게 賦存되어 있는 광산자원과 해양자원, 양질의 인적자원 및 자본과 기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권 형성을 위한 기본조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협력의 진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이념 장벽의 해소와 각 역내국가의 적극적인 지역개발정책은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밝은 전망을 더해주고 있다. 동북아 협력이 현 단계에서 制度的 統合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크

지 않지만 우선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내국의 자원을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차원의 多者協力을 통해 북한의 참여와 개혁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戰略的 側面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역협력 참여는 지역 협력의 활성화 뿐 아니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내의 상호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라는 다자간 틀 속에서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남북한 쌍방간의 협력 강화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그 기반 위에서 역내국가들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경제를 강타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준다. 특히 현재의 위기는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경제구조와 성장전략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도 경제위기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동북아 국가들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그 발발의 원인과 관련하여 경제의 범세계화 추세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했지만 이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추세로 볼 때 각국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위기 해소에 충분치 않으며 각국의 역할과 정책적 협력이 조화되어야 한다. 일본의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중국의 위안화 가치안정 및 개방 가속화 그리고 한국의 구조개혁 노력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성장지향적 정책기조의 조화를 통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동북아 경제협력의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지역협력은 대부분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통합 현상은 실물부문보다는 금융부문에서 더욱 급속히 진행되었고 국제금융의 통합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이번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위기로부터의 조기 회복과 재발 방지는 안정적 지역협력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서도 금융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금융협력의 성격은 역내 금융의 안정을 위한 정책협력과 더불어 동북아 국가간의 컨센서스 형성을 통하여 세계금융질서 개편을 위한 국제적 논의과정에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공동의 노력을 포함한다.

셋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의 하나는 내수의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구조개혁에 따른 실업증대 해소에 고심하고 있는 중국이나 내수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 역내 각국의 정책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출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고 이는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개발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역내 각국간 資源賦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경제적 보완성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통신망 등 역내 인프라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적 협력과제로서 인프라 협력 및 자원협력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북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경제의 對美依存度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일단 이번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달러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차원

의 금융체제 구상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고 있는 등 무역과 금융 양 부문에서의 지역협력의 심화가 예상된다. 다만 동북아 국가들의 대외지향적 경제구조가 지니는 한계를 감안할 때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 하에서 이러한 협력은 세계 무역 및 금융체제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보다 개방적인 성격을 띠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